

박선호 차관, “건설사고 절반 감축을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”

2월 중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

9일 제2차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서 발주기관업계, 노동계 적극 협조 당부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9일(목)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.

○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, 공공기관, 업계,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,

-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킷오프 회의(11.6, 장관 주재)에서 논의한 4가지 방향*을 토대로 실무위원회 및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최종 논의했다.

* ①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역할 정상화, ② 사고대가보다 예방이 비용경제적인 구조로 전환, ③ 안전제도 합리화, ④ 안전문화 생활화

○ 이번 건설안전 혁신방안은 민간 건축공사, 기계·장비 작업 등 취약 분야 집중관리, 발주자·시공사·감리 등 사업주체별 안전책임과 권한 명확화, 규제합리화 및 국민감시단 도입을 통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, 범부처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 생활화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다.

□ 한편,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사고 사망자 통계 집계('99년) 이후 역대 최저치(기존 '14년 434명)이며, 사망자 감소폭 또한 '18년 대비 2.7배 이상 확대*되었으나,

* '17년 506명 → '18년 485명(△21명, 4.2%) → '19년 428명(△57명, 11.8%)

○ 여전히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,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.

- 박선호 차관은 “이번 혁신방안은 대책 마련 초기단계부터 전문가, 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 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”고 말했다.
- 박 차관은 “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2월중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”이라면서,
- “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사고감소로 이어진다”고 강조했다.
- 아울러, “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, 발주기관과 업계, 노동계도 앞으로 대책 이행에 방점을 두고 적극 협조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2020. 1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